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목 차>

1.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
2.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3.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4.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기준
5. 보고 및 공시
6.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7.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8. 인허가 등의 심사시 고려사항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박보란
	담당부서 (과)	금융그룹감독혁신 단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		연락처	02-2100-2593
	과장	권주성		이메일	2080894@mail.go. kr

2021. 03. 30.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									
	2.규제조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									
	3.위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4.01 ~ 2021.04.2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법령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이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									
	7.규제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일시적으로 자산총액 5조원 등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									
	8.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div>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div>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td><td>21년 3월 현재 6개 집단</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	21년 3월 현재 6개 집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	21년 3월 현재 6개 집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일시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여 법 적용의 안정성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이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정이 유지되어 법령 준수의 부담이 연장될 수 있으나, 일시적인 지정요건 미달로 향후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 적용하는 규제이므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11.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p> <p>②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 기준이란 영 제6조제7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p> <p>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신청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p>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지정해제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정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감독규정에 위임
- 국제기준(EU FICOD, EU 금융그룹감독지침)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바, 국제기준을 충실히 반영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 사유 구체화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 합계가 지정 요건인 5조원의 80% 이상(4조원)인 경우, 5조원에 미달하더라도 지정을 유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지정 유지 요건 명확화
	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법령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감독규정에 위임

3. 규제목표

- 일시적인 자산총액 하락 등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정 유지 조건을 명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이 일시적으로 5조원에 미달하나,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법 적용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 EU FICOD에서도 급격한 제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제도를 적용 중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에 대한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

독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 ·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유럽의 금융그룹감독지침(Ficod)에서도 금융그룹이 일시적으로 금융그룹 자산 기준 등에 미달하더라도 3년간 법 적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EU FICOD §3⑥

6. 제1항과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충적 감독의 대상이었던 대기업에 대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비율이 각각 40%와 1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급격한 제도 변경을 피하기 위하여, 이후 3년동안 그보다 낮은 비율인 35%와 8%를 각각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제3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충적 감독의 대상이었던 대기업에 대해 그룹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금융 부문의 대차대조표 자산 총액이 60억 달러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급격한 제도 변경을 피하기 위하여, 이후 3년동안 그보다 낮은 액수인 50억 달러를 적용한다.

감독조정자는 본 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 기타 관련 감독 당국의 동의를 얻어 본 항에 규정된 낮은 비율 또는 낮은 액수의 적용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 사유 구체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 사유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감독규정 제정 과정에서 피규제자인 금융복합기업집단과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지정유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로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 금융업권 협회, 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 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

3. 종합결론

- 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 사유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이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정이 유지되어 법령 준수의 부담이 연장될 수 있으나, 일시적인 지정요건 미달로 향후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 적용하는 규제이므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 사유 구체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금융복합기업집단(비지주 금융그룹)
활동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
비용항목	법령 준수 부담 연장 등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유지되므로, 법령을 지속 준수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일시적인 자산총액 하락에 해당하고, 자산총액이 향후 다시 5조원을 상회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재지정될 것을 감안하면 지정의 유지는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법 적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 기존에 이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이 지정이 연장되는 형태이므로, 새로운 법령 준수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바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움.

② 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금융소비자
활동제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유지
편익항목	법적 안정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산총액 기준을 일시적으로 하회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해제가 반복됨에 따라 생기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2.규제조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7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등), 제8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 운영)								
	3.위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4.01 ~ 2021.04.2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 집행의 명확화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 -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								
	7.규제내용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에는 '소속계열사와 공동 또는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내부통제기구에는 여수산업, 보험업, 금투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내부통제기구 참석자는 소속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td><td>21년 3월 현재 6개 집단</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21년 3월 현재 6개 집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21년 3월 현재 6개 집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기구 운영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법 해석 및 준수의 용이성 제고되고 내부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효과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가 이루어짐으로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사전적으로 예방되는 효과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해당없음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기준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1.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공동 또는 상호간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p> <p>가. 소속금융회사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p> <p>나. 소속금융회사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간 업무위·수탁에 관한 사항</p> <p>다. 소속금융회사간 공동 투자에</p>

현 행	개 정 안
	<p>관한 사항</p> <p>라. 소속금융회사간 공동 금융상품 개발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p> <p>2. 그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 통제수준 제고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p> <p>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p> <p>제8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대표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모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이하</p>

현 행	개 정 안
	<p>‘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위하는 업을 대표하는 소속 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는 소속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준법감시인 등”이라 한다)가 참여하여야 하며, 내부통제협의회의 의장은 대표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등으로 한다.</p> <p>④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금융회사(영제1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전달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766 190 1398 280"><별표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용 등에 관한 사항</p> <p data-bbox="766 336 1398 425">1. 임원 인사교류에 대한 점검·관리방안 (영 제10조 제1항 제1호 마목 관련)</p> <p data-bbox="766 481 1398 683">소속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임원 인사교류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p> <p data-bbox="766 694 1398 784">(1) 금융관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p> <p data-bbox="766 795 1398 884">(2) 소속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p> <p data-bbox="766 896 1398 1041">(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p> <p data-bbox="766 1052 1398 1142">(4)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p> <p data-bbox="766 1153 1398 1243">(5)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p> <p data-bbox="766 1299 1398 1444">2.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공동 또는 상호간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규정 제7조 제2항 제1호 관련)</p> <p data-bbox="766 1500 1398 1758">소속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공동 또는 상호간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p> <p data-bbox="766 1769 1398 1859">(1) 금융관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p> <p data-bbox="766 1870 1398 1960">(2) 소속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p> <p data-bbox="766 1971 1398 2016">(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p>

현 행	개 정 안
	<p>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p> <p>(4)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p> <p>(5)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법 적용의 범위와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내부통제기구 운영 등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기구 운영 등 구체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 - 내부통제기구 구성 및 참석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내부통제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관련 소속금융 회사에게 전달하도록 의무 부과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 명확화
	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기구의 운영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 집행과 준수가 용이해짐

3. 규제목표

- 체계적인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기구 운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수준이 제고되어 건전성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일부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 부담에 해당하지 않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규율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규율에 대한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4. (생략)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16. (생략)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5.~6. (생략)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점장(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점장이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관장하는 관리조직의 장이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관련협회등은 소속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금융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생략)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기구 운영 등 구체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기구 운영 등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약 2년여간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되던 내용과 유사하여 피규제자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는 내용으로, 향후 감독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 금융업권 협회, 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 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

3. 종합결론

- 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기구 운영 등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가 이루어짐으로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사전적으로 예방되는 효과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기구 운영 등 구체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금융복합기업집단
활동제목	내부통제 업무 수행
비용항목	업무량 증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기준 수립 및 준수를 위한 업무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법 및 시행령에 따라 既발생하는 부담으로 감독 규정 제정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부담은 아님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2.규제조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등),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3.위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4.01 ~ 2021.04.2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 집행의 명확화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험관리기준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								
	7.규제내용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체계, 조기경보체계 등이 반영되어야 함 - 위험관리기구에는 여수산업, 보험업, 금투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위험관리기구 참석자는 소속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td><td>21년 3월 현재 6개 집단</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21년 3월 현재 6개 집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21년 3월 현재 6개 집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위험관리기구 운영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법 해석 및 준수의 용이성 제고되고 위험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효과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집단 차원의 위험관리가 이루어짐으로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사전적으로 예방되는 효과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해당없음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기준 등)</p> <p>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기관리체계의 운영 및 점검 나. 조기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통합 위기상황 분석 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비상계획 2. 그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p>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설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p> <p>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① 법 제12조 제3항에서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대표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모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위하는 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는 소속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p>

현 행	개 정 안
	<p>자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참여하여야 하며, 위험관리협의회 의장은 대표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등으로 한다.</p> <p>④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금융회사(영 제 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전달하여야 한다.</p> <p><별표 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의 설정·운용 등에 관한 사항</p> <p>1.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상황 대응체계가. 위기관리체계(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 관련)</p> <p>(1)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p>

현 행	개 정 안
	<p>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 위험인식, 위기상황단계 설정, 영향 분석, 위기상황단계별 조치 이행, 동 조치 결과 보고 등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 집단 수준의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p> <p>(2) 소속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관리체계에 부합하는 당해 회사의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p> <p>나. 조기경보체계(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 관련)</p> <p>대표금융회사는 위기 유형별로 또는 종합적인 위험에 대하여 위기유발 요인을 선정하여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고, 조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방안 및 업무절차 등을 포함하는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p> <p>다. 통합 위기상황분석(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 다목 관련)</p> <p>(1) 통합 위기상황분석은 금융복합기업 집단 수준에서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p>

현 행	개 정 안
	<p>능한 사건에 대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법을 말한다.</p> <p>(2) 통합 위기상황분석은 경영환경을 고려한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동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및 동 분석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위기상황 시나리오 검증 및 수정·보완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p> <p>(3)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 또는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는 금융회사별 위험 특성 및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한 주요 소속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 및 대응방안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 및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또는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4) (3)의 주요 소속금융회사 위험관리 책임자 등은 연 1회 이상 자체 위기 상황분석을 실시하여 그 실시 결과 및 대응방안을 당해 회사 이사회 등에 보고한 후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p> <p>(5) 대표금융회사는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부담한도 설정, 위기관리체계 개선 등 중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p> <p>라. 비상계획(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 라 목 관련)</p> <p>(1) 대표금융회사는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유동성 위기상황 단계별 대응방안,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 위기대책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2)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 등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비상계획을 연1회 이상 점검·갱신하고, 이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법 적용의 범위와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위험관리기구 운영 등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기구 운영 등 구체화
	내용	- 시행령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 - 위험관리기구 구성 및 참석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위험관리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관련 소속금융 회사에게 전달하도록 의무 부과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위험관리 관련 사항 명확화
	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기구의 운영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 집행과 준수가 용이해짐

3. 규제목표

- 체계적인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기구 운영으로 금융복합기업집

단의 위험관리수준이 제고되어 건전성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일부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 부담에 해당하지 않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규율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규율에 대한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

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Joint Forum(국제 금융감독 협의체)의 금융그룹 감독원칙

Joint Forum 감독원칙

13. 감독자는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금융그룹의 경영전략·위험감수성향을 적절히 설정하고 그룹내 모든 규제·비규제 기업에 동 경영전략이 실행되도록 요구해야 함
- 13(a) 감독자는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구성기업들의 그룹 경영전략 및 위험감수성향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체계를 갖추 것을 요구해야 함
- 13.(c) 감독자는 금융그룹에 모그룹이 있는 경우, 금융그룹의 본사가 그룹의 지배구조 체계에 따라 모그룹 및 최상위 모회사와의 관계를 관리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 13.(d) 감독자는 금융그룹 구성기업들이 그룹 및 자신들의 경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기업들이 자원(resources)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함
21.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탄탄한 내부통제, 효율적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과 더불어 독립적·포괄적·효율적인 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요구해야 함

o 타법사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4. (생략)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

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16. (생략)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2.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의 설정·운영
4.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
5.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7. 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유지
8.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수준(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③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유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본인만으로 위험관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임원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4. 그 밖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기구 운영 등 구체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기구 운영 등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약 2년여간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되던 내용과 유사하여 피규제자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는 내용으로, 향후 감독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 금융업권 협회, 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 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

3. 종합결론

- 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기구 운영 등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집단 차원의 위험관리가 이루어짐으로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사전적으로 예방되는 효과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기구 운영 등 구체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금융복합기업집단
활동제목	위험관리 업무 수행
비용항목	업무량 증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기준 수립 및 준수를 위한 업무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법 및 시행령에 따라 既발생하는 부담으로 감독 규정 제정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부담은 아님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기준									
	2.규제조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별표3, 별표4									
	3.위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4.01 ~ 2021.04.2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상술하고 평가 방법 및 평가항목 등을 정함									
	7.규제내용	-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함 - 추가적인 위험 평가의 항목을 정하고, 이에 따른 가산비율의 범위를 0~20%로 정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td><td>21년 3월 현재 6개 집단</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21년 3월 현재 6개 집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21년 3월 현재 6개 집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비율 및 건전성이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 용	편 의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자본적정성 비율을 준수하고 이를 평가받는 행정적 부담은 존재하나, 자본적정성을 평가받고 스스로 관리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낮아짐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 정성 기준)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 요구자본합계액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p> <p>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영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p> <p>④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가산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범위는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100분의 0에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5>에 따른다.</p> <p>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p>

현 행	개 정 안
	<p>본적정성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p> <p><별표 3> <u>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u> <u>산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u></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p>1. 자기자본합계액의 산정</p> <p>가. 소속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은 해당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자기자본으로 한다.</p> <p>나. 금융관계법령에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소속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인 소속금융회사는 소재지국의 감독당국이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하며, 소재지국의 감독당국이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과 유사한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40px;">○ 자기자본 =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 - 무형자산 - 이연법인세자산</p> <p>다.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종속회사이고, 지배회사인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가목에 따라 산출된 지배회사의 자기자본에 종속회사의 자기자본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에 대한 자기자본을 별도로</p> </div>

현행	개정안
	<p>산정하지 않는다.</p> <p>라.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경우 자기자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영업용순자본을 의미한다.</p> <p>마. 보험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은 보험업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연결대상회사를 기준으로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 등에 따라 산출한 자기자본으로,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p> <p>2. 중복자본의 산정</p> <p>가. 소속금융회사간에 보유한 보통주 주식 및 보통주 주식 외에 해당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한 소속금융회사간 거래액(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p> <p>나.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회사 등을 경유하여 동일 또는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순환 또는 우회하여 출자한 경우 해당 출자 금액</p> <p>다.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 외의 회사와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증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조달수단(다만, 상호보유 자본조달수단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금융감독원장에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p> <p>(2) 자본증권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p> <p>라. 1호다목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자본적정성 계산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액 등이 이미 제거된 경우에는 가목부</p>

현행	개정안
	<p>터 다목까지의 합산금액에서 제외한다.</p> <p>3.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정</p> <p>최소요구자본합계액은 각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최소요구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호의 중복자본 항목에 대하여 요구되는 최소요구자본은 제외한다</p> <p>가. 소속금융회사의 최소요구자본은 해당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과 해당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 중 큰 금액으로 한다.</p> <p>나. 금융관계법령에서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소속금융회사의 최소요구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인 소속금융회사는 소재지국의 감독당국이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으로 하며, 소재지국의 감독당국이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과 유사한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p> <p>○ 최소요구자본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외자산을 포함하며, 제1호에 따라 자기자본에서 전액 공제되는 항목은 제외한다)] × 8%</p> <p>다.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종속회사이고, 지배회사인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가목에 따라 산출된 지배회사의 최소요구자본에 종속 금융회사의 최소요구자본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에 대한 최</p>

현행	개정안									
	<div><p>소요구자본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p><p>라.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경우 최소요구자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 3-1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위험액에 같은 규정 제3-6조제2호에 따른 필요유지자기자본을 합산하여 계산한다.</p><p>마. 보험회사의 경우 최소요구자본은 보험업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연결대상 회사를 기준으로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 등에 따라 산출한 최소요구자본으로,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p></div> <div><별표 4></div> <div><div>위험자산자본 부문별</div><div>평가항목(제11조제3항 관련)</div></div> <table><tr><th>평가부문</th><th>세부평가부문</th><th>평가항목(평가지표)</th><th>비중</th></tr><tr><td rowspan="2">계열회사 위험(30%)</td><td rowspan="2">재무적 위험¹⁾</td><td>· 소속금융회사의 자본비율(은행) 단순자기자본비율(1종 금융투자업자) 순자본비율Ⅱ(3종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td><td rowspan="2">20%</td></tr><tr><td>· 소속비금융회사²⁾의 재무비율(매출액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자기자본대비 총차입금, 총차입금 대비 EBITDA³⁾,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자산)</td></tr></table>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평가지표)	비중	계열회사 위험(30%)	재무적 위험 ¹⁾	· 소속금융회사의 자본비율(은행) 단순자기자본비율(1종 금융투자업자) 순자본비율Ⅱ(3종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	20%	· 소속비금융회사 ²⁾ 의 재무비율(매출액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자기자본대비 총차입금, 총차입금 대비 EBITDA ³⁾ ,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자산)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평가지표)	비중							
계열회사 위험(30%)	재무적 위험 ¹⁾	· 소속금융회사의 자본비율(은행) 단순자기자본비율(1종 금융투자업자) 순자본비율Ⅱ(3종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	20%							
		· 소속비금융회사 ²⁾ 의 재무비율(매출액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자기자본대비 총차입금, 총차입금 대비 EBITDA ³⁾ ,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자산)								

현행	개정안			
		비재무적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²⁾, 대주주, 대표이사) 시행령 제4조의 금융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처벌,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⁴⁾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등급⁵⁾의 변동 	5 %
	상호연계성 (50 %)	소유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금융회사의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비중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비금융회사의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율 	10 %
		내부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금융회사의 내부거래 수익 비중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액 비중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수익 집중도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집중도 	2.5 %
		공동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금융회사의 공동투자 비중 	5 %
		출자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출자구조의 복잡성 	5 %
		인사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간 임원 겸직 등 인사교류의 적정성 	5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⁶⁾ (20 %)	내부통제 정책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정책 수립 여부 및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 감독규정 제7조에 관한 사항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적정성 및 법 제10조, 시행령 제11조, 감독규정 제8조에 관한 사항 	5 %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정책 수립 여부 및 법 제11조 제1항 각호 	5 %

현행	개정안			
		정책 및 기준	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기준 마련 여부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 감독규정 제9조에 관한 사항	
	위험 관리 체계 운영		· 위험관리체계 운영의 적정 성 및 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감독규정 제10조 에 관한 사항	5 %
주 1) 재무적 위험 평가는 기업집단내에서 각 소속금융회사 및 소속비금융회사 의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상 총자 산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반영 2) 국내 소재의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 상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소속비금 융회사를 대상 3) EBITDA=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4) 행정처분 및 법원 확정 판결시 당해 연도의 평가에 반영 5)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 반영 6)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충족(+1), 미충족(0)으로 평가하고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 가등급 산정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본적정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위험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자본적정성 기준 및 추가적인 위험 평가 항목 등 마련
	내용	①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 - 업권별 금융법령상 자기자본, 최소요구자본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자기자본, 최소요구자본 산출 방법을 마련 - 중복자본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마련 ② 추가적인 위험 평가 항목 및 가산비율 마련 - 추가적인 위험 평가 항목을 크게 계열사위험, 상호연계성, 내부통제·위험관리로 구성하고, 각각에 해당되는 세부항목 및 평가가중치를 정함 - 평가등급에 따라 위험가산비율은 0~20% 사이가 되도록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 1회 이상)	자본적정성 산출 방식 및 평가표 명확화
	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본적정성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의 법령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
- 추가적인 위험평가 방식을 정함으로서 수범자가 평가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함

3. 규제목표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도록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금융당국으로부터의 평가 부담이 발생하나, 이를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므로 정책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로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규제로서 보조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규제로서 계속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몰설정 곤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Joint Forum 감독원칙

7. 감독자는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 중심의 최소 건전성 기준 통합체계를 수립·이행·유지해야 함
- 7(b) 감독자는 자본과다계상·위험전이·위험집중·이해상충·내부거래 등 금융그룹의 위험을 적절히 진단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설정해야 함
- 15(i)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그룹업무 관련 위험 대비용 완충자본 마련 등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도록 요구해야 함
- 15(iii)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평가시 그룹 차원의 위험 요소를 고려·평가하도록 요구해야 함
16.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비규제기업 위험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위험을 고려하고, 제3자 참여 및 소수주주 이익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
- 16(a) 감독자는 그룹내 모든 규제·비규제 기업을 대상으로 그룹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해야 함. 비규제 기업도 자본대용치(capital proxy) 또는 공제 방식으로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에 포함되어야 함
- 16(c) 그룹내 규제기업에서 비규제기업으로 위험이 전이된 경우, 규제기업의 감독자는 비규제기업의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을 검토해야 함
17.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자본과다계상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
- 17(a)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자본 과다계상(예.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규제자본 제공)을 적절히 포착하도록 요구해야 함
- 17(d) 감독자는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소유구조(자매회사의 자본소유) 및 과도하게 복잡한 기업구조가 자본 과다계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 17(e) 감독자는 서로 다른 금융그룹이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룹 내부의 자본 과다계상과 유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18.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평가시 과도한 레버리지 및 모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자회사에게 주식 형태로 이전하는 행위를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

19.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시 내부 자본이전과 관련 하여 잠재적 제약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제약사항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

EU 감독지침

제6조(자본적정성) ① 권역별 감독규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합금융그룹내 규제대상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보완적 감독은 본 지침 제2장제3절의 제9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과 부록 I 을 따라야 한다.

② EU회원국은 복합금융그룹 내 각 규제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복합금융그룹 수준에서 부록 I 의 계산방식에 의해 계산된 자본적정성 기준을 항상 충족시키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록 I (2. 기타기술적 원칙) 中 자본의 중복이용 및 부적절한 내부거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주무감독기관은 자본적정성 규정의 목표 하에서 그룹내 기관들 상호간에 자기자본의 양도가능성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유효성을 고려해야 한다.

부록II(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조항에 관한 기술적 적용) 中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을 검토함에 있어 감독조정자는 특히 복합금융그룹내 위험전이성, 이해상충위험, 규제회피위험 및 위험의 크기를 감시해야 한다.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제17조(자본적정성) ① 금융그룹은 그룹 수준에서 적절한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② 연방청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한다. 금융그룹 모회사는 연방청과 독일 연방 은행에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위험집중 및 그룹 내부거래) ① ~ ③ (생략)

④ 연방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방청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그룹의 모회사가 초과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생략)

제24조(위험집중과 그룹 내부거래 관련 상세조항의 법령 제정 권한 위임) ① 연방재무부는 독일 연방 은행과 협의하여 연방 상원 동의를 요하지 않은 법령을 통해 지침 2002/87/EC 제7조와 제8조 및 부속서 II 이행을 위한 위험집중과 그룹 내부거래 관련 다음 상세한 규정을 명시할 권한이 있다.

1. (생략)

2. 상당한 위험집중과 중요한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상한선 및 그룹 내부거래의 성격에 대한 제한

3. (생략)

○ 타법사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

가. 은행지주회사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
-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여전업 감독규정

제8조(경영지도비율)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19조의 20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 비율 :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이상
 2.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 : 100분의 100이상
 3.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 : 100분의 10미만(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조정총자산, 조정자기자본, 원화유동성부채, 원화유동성자산 및 1개월이상 연체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조정총자산 및 조정자기자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한다.
1. 조정총자산은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조정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감독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자본적정성 기준 및 추가적인 위험 평가 항목 등 마련>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자본적정성 기준 및 추가적인 위험 평가 항목 등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자본적정성 규제가 실시되더라도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을 통해 자본적정성 감독 및 평가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 금융업권 협회, 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 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

3. 종합결론

- 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자본적정성 기준 및 추가적인 위험 평가 항목 등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자본적정성 비율을 준수하고 이를 평가받는 행정적 부담은 존재하나, 자본적정성을 평가받고 스스로 관리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낮아짐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자본적정성 기준 및 추가적인 위험 평가 항목 등 마련>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금융복합기업집단
활동제목	추가적인 위험평가에 따른 위험가산
비용항목	자본적정성 비율 하락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추가적인 위험평가에 따라 자본비율이 현재보다 하락할 수 있으나 모의시산 결과 자본적정성 비율(100%)를 여유있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감내가능한 수준</p> <p>* 최대가산비율인 20%를 적용한 경우에도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34%~272%</p>

☐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금융복합기업집단
활동제목	자본적정성 평가부담
비용항목	시장의 평가부담 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자본적정성 규제 후에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자본적립 의무 등은 발생하지 않으나, 시장의 평가부담, 자산운용시 제약요인 발생 등 간접적 규제효과 발생</p>

② 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금융소비자
활동제목	자본적정성 기준 준수
편익항목	자본적정성 기준 준수에 따른 금융부실 발생 방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자본적정성 평가를 받고 추가적인 자본 규제를 받음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확보 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부실위험이 감소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보고 및 공시									
	2.규제조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4조(보고 및 공시)									
	3.위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보고 및 공시)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4.01 ~ 2021.04.2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보고 및 공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고 및 공시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									
	7.규제내용	- 보고 및 공시는 매 분기별로 실시하며, 분기별 보고 및 공시의 기한을 정함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보고 및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td><td>21년3월 현재 6개 집단</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21년3월 현재 6개 집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21년3월 현재 6개 집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보고 및 공시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령 준수가 용이하도록 함 -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추가적인 보고 및 공시항목을 정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보고 및 공시에 따라 행정적 업무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既시행중인 제도로 법령 및 감독규정 제정에 따른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11.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 일 물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보고 및 공시)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고 및 공시기한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고의 경우 매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 말인 경우에는 3월 이내) 2. 공시의 경우 매 분기 말일부터 3월 이내(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 말인 경우에는 5월 이내) <p>② 영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해당 금융회사 및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영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신용공여 현황 등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4.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금융회사 및 그 임원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주요 소송 현황

현 행	개 정 안
	<p>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공시 항목 및 내용, 기타 보고·공시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보고 및 공시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고 및 공시의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대안명	보고/공시 시기와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규제대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및 공시는 매 분기 실시하되, 보고는 매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 공시는 매 분기 말일부터 3월 이내 실시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보고 및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1)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대주주에 대한 출자 및 신용공여 현황, 4)금융위 또는 금감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등을 규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보고 및 공시 내용 및 절차 협의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다른 법령에서 보고 및 공시해야 하는 사항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 준수비용이 적으며,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미 운영 중인 사항

3. 규제목표

-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정기적인 공시를 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건전성 통제를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보고 및 공시 사항을 감독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보고 및 공시 시기를 정하는 조항으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스스로 준수하여 보고 및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 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 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 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 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부 면 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경영공시)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방침 및 계획, 경영전략 등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방법,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4.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또는 금융지주회사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간의 내부거래 규제정책, 규제대상 및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
 6. 금융지주회사등이 지출한 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
 7. 전환대상자의 경우 승인받은 전환계획 및 전환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 ③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 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④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상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점포 및 시설 또는 사무기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당해 금융기관의 이용자에게 관련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관련감독기관으로부터의 감독여부 등을 공시자료 또는 상품설명서, 점포내 게시물 등을 통하여 즉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내용 기타 공시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보고/공시 시기와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보고/공시 시기와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행정지도를 통해 보고 및 공시를 既시행하고 있으므로 금융복합 기업집단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보고 및 공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스스로 수행하므로 행정적 집행비용이 들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 금융업권 협회, 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 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

3. 종합결론

- 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보고/공시 시기와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보고 및 공시에 따라 행정적 업무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既시행중인 제도로 법령 및 감독규정 제정에 따른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보고/공시 시기와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활동제목	보고 및 공시
비용항목	보고 및 공시 업무(업무량 증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주기적으로 법령에 따른 보고 및 공시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나 감독규정은 시행령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으로 감독규정 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님

② 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금융소비자
활동제목	보고 및 공시
편익항목	주기적 공시를 통한 시장의 통제 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분기별로 공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장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상황 등을 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시장의 통제가 강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2.규제조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3.위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4.01 ~ 2021.04.2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평가항목, 지능, 등급, 평가방법 등을 정할 필요									
	7.규제내용	평가부문은 내부통제체계,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 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종합평가 결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									
	8. 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td><td>21년 3월 현재 6개 집단</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21년 3월 현재 6개 집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21년 3월 현재 6개 집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위험 관리실태 평가 실시 부문 등을 세분화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건전성 및 위험관리체계가 충실해짐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감독당국으로부터 평가받는 부담이 있으나 이는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실시되는 경영 실태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감독당국의 평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위험 관리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집단 차원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물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해당없음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 실태 평가) ① 위험 관리실태 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실태를 <별표6>에 따른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위험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한다.</p> <p>② 위험 관리실태 평가는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위험 관리실태 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p> <p>③ 제1항에 의한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방법, 등급구분 등 위험 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감독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 평가함에 있어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평가 부문과 평가 등급 등을 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위험 관리실태 평가 부문 및 평가등급 규정
	내용	위험 관리실태 평가 부문 - 내부통제체계,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전이위험 위험관리실태평가 등급 : 1~5등급으로 구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 1회 이상)	위험 관리실태 평가 세부사항 명확화
	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위험 관리실태 평가를 타 금융업권의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준수 부담이 크지 않음

3. 규제목표

- 위험 관리실태 평가를 구체화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험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차원의 위험 관리가 충실하도록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위험 관리실태 평가는 지난 2년간 모범규준으로 시범운영해온 평가이며 다른 금융업권의 경영 실태평가와 유사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준수 부담이 크지 않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로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 평가를 전제로 하는 규제로서 보조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 평가를 전제로 하는 규제로서 계

속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부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재무상태 부문에 대하여 분기별로 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리스크관리(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나.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다.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라. 내부통제

2. 재무상태(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자본적정성
- 나. 자산건전성
- 다. 수익성
- 라. 유동성

3. 금융지주회사 및 여타자회사등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잠재적 충격(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금융지주회사
- 나. 여타자회사등
- 다. 내부거래

④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⑤ 제3항제3호의 주력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통하여 영위하는 금융업종중 가장 큰 업무비중(신탁계정 제외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업종의 자회사가 2이상인 경우 합산한다.)을 차지하는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사업목적, 경영전략, 업무범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는 자회사(다만,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자회사를 주력자회사로 한다)를 말하며, 여타자회사등은 주력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등을 말한다.

⑥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위험 관리실태 평가 부문 및 평가등급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위험 관리실태 평가 부문 및 평가등급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모범규준으로 약 2년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제도를 운영하면서 위험 관리실태 평가도 모의실시하였으므로 피규제자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준수 부담이 크지 않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을 통해 평가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 금융업권 협회, 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 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

3. 종합결론

- 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위험 관리실태 평가 부문 및 평가등급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감독당국으로부터 평가받는 부담이 있으나 이는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실시되는 경영 실태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감독 당국의 평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위험 관리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집단 차원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위험 관리실태 평가 부문 및 평가등급 규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금융복합기업집단
활동제목	위험 관리실태 평가
비용항목	평가 업무 증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위험 관리실태 평가가 정기적(3년)으로 실시됨에 따라 감독당국의 평가에 대한 평가대응업무 발생

② 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금융소비자
활동제목	위험 관리실태 평가
편익항목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위험 관리실태 평가로 인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위험관리를 강화하게 되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 위험이 감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2.규제조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6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3.위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4.01 ~ 2021.04.2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법률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감독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를 위임하고 있는 바, 이를 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7.규제내용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에 해당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td><td>21년 3월 현재 6개 집단</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21년 3월 현재 6개 집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	21년 3월 현재 6개 집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법 해석의 명확성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법 및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감독규정 제정으로 인한 새로운 규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에 따른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해당없음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법 제</p> <p>2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 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영 제18조 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p>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률은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로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해당 기준은 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위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건
	내용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이 100% 미만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 1회 이상)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건 협의
	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다른 금융법령에서 경영개선계획 등을 제출해야하는 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피규제자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담은 크지 않음

3. 규제목표

-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건을 명확히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다른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조치 요건과 유사하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준수 부담은 크지 않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감독당국의 조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조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감독당국의 조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 운영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감독당국의 조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감독당국의 조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감독당국의 조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감독당국의 조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감독당국의 조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건>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준비용		연간균등준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다른 금융업권에서 규제하는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준수 부담은 크지 않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을 통해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 금융업권 협회, 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 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

3. 종합결론

- 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법 및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감독규정 제정으로 인한 새로운 규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에 따른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건>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금융복합기업집단
활동제목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비용항목	업무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것이 명백한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여 업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인허가 등의 심사시 고려사항								
	2.규제조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17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3.위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4.01 ~ 2021.04.2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법 및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업종의 인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자본적정성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하며 세부적인 요건을 감독규정에 위임								
	7.규제내용	1)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업종: 은행업,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보험업 2) 자본적정성: 통합자기자본을 최소요구자본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 이상일 것								
	8. 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집단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집단</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집단	-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집단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인허가 등으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집단이 금융복합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자본비율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자본비율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융집단이 금융복합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① 영 제21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이란 인허가 등을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설립·존속하게 되는 금융회사 또는 승인을 통해 취득·양수한 주식을 발행한 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제외한다)을 주 업무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p>② 영 제21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허가 등을 함으로써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여수

현 행	개 정 안
	<p> 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한정 한다.)의 통합자기자본을 최소요구 자본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 의 100 이상일 것. 이 경우 통합자 기자본과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 정방식은 제11조를 준용한다. </p> <p> 2.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시점 까지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p> <p>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 및 시행령에서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감독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구체화
	내용	1) 금융위원회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승인 대상 업종: 은행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보험업 2) 고려해야하는 자본적정성 기준: 통합자기자본을 최소요구자본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 이상 일 것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회사	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인허가 심사 시 고려사항 명확화
	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인허가 심사 시 고려해야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임

3. 규제목표

- 인허가 심사 등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융집단의 건전성을 사전적으로 검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인허가 등으로 인해 집단차원의 재무 비율이 현저히 악화된 금융집단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실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건전성 기준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적절한 규제로 생각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심사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 조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제도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심사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심사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심사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심사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심사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구체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융업권과 TF를 통해 논의해온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인허가 등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는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금융업계의 부담은 크지 않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을 통해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 금융업권 협회, 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 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

3. 종합결론

- 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인허가 등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집단의 경우 추가적인 심사요건이 생기는 것이나, 이는 심사 통과 여부를 정하는 규정은 아니며(고려사항) 해당 집단의 금융회사들이 개별업법상 자본비율을 준수하는 상황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임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구체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인허가 등의 대상 금융회사
활동제목	인허가 등 심사시 고려사항
비용항목	자본적정성 등 고려에 따른 간접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등의 심사로 인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본적정성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고려하는 규정으로, 감독당국이 자본비율을 검토하는 데에 따른 부담은 존재하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실제 적용되는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므로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음